

‘단기성과’ 보단 장기수익률... ‘S 코드’로 공공성 강화

(스튜어드십 코드)

국민연금 변해야 산다

〈중〉‘공공성’ 강화 나선 국민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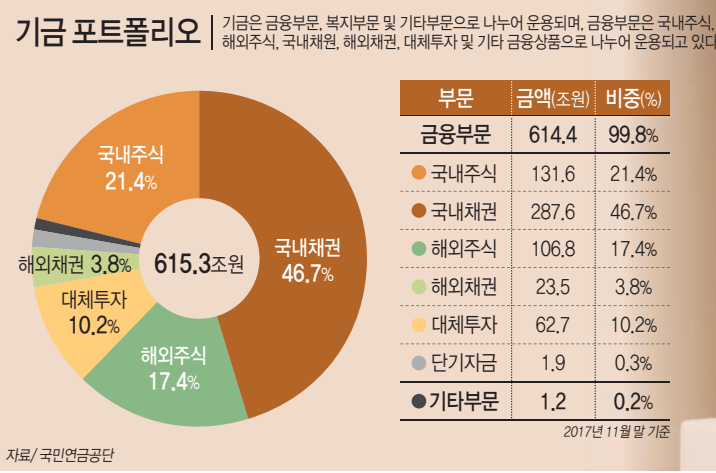
김성주사장, 수익률 지상주의 반대
美·英 등 선진 20여개 국서도 도입
연기금·자산운용사로 확대 기대

지난해 11월 말 기준 무려 615조원의 국민연금 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은 지금껏 ‘기금운용 수익률 극대화’에 초점을 맞춰왔다. 앞으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방침은 ‘공공성 강화’라는 새로운 원칙이 적용될 전망이다.

정치권의 요구는 물론 수 개월간의 공석 끝에 문재인 정부에서 첫 국민연금 이사를 맡은 김성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익률 지상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이 뚜렷해졌다.

김 이사장은 과거 의원 시절부터 수익률을 중시하는 기존 기금운용 정책에 분명한 반대 의견을 펼쳐왔다. 그는 수익률 극대화에 기금운용의 초점이 맞춰질 경우 변동성이 커지고 금융위기 등이 닥쳤을 때 대규모 투자손실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김 이사장은 지난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시절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1%포인트 낮아지면 기금소진 시점이 오는 2055년으로 5년 당겨진다’며 수익률 극대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연금금이 오는 2060년이면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 하반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6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공단은 현재 ‘공공성 강화’ 방침 가운데 하나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주요 상장기업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기관투자자로서 의결권 행사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은 투자수익 보호를 통해 기금의 중·장기적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미 미국과 영국 등 해외 20여 개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이르면 올 하반기 도입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공식화함에 따라 다른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들의 참여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상장기업은 총 275개. 이 중 10%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은 모두 84개다.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들의 지분가치를 더하면 무려 117조원에 이른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들이 그동안 ‘거수기’ 구실에서 벗어나 주주총회 안건에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함은 물론 투자사의 장기적 가치 향상을 위해 경영진과 머리를 맞댄다면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도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기금운용본부장 없는 ‘기금 국민설명회’

국민연금은 지난달 출범 30년 만에 처음으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 국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김성주 이사장이 직접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기금운용 현장인 주식운용실과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이 지난해 26일 전북 전주 국민연금 기금관에서 열린 기금 국민설명회에 참석해 기념사를 읽고 있다.

해외증권실 등을 함께 돌았다. 기금운용 특성상 기금본부는 외부 노출을 철저히 통제해 온 곳이다. 내부 직원도 출근 시 휴대폰을 제출해야 할 정도다.

이날 국민연금이 밝힌 국민연금 주식운용실의 기금운용 규모는 현재 약 131조로 국내 전체주식 시가총액 1888조원 중 약 7%에 해당한다. 지난해 국내주식 투자로 27조원의 수익을 올렸다. 주식운용실 직원 수로 나누면 1인당 1조8000억원의 수익을 올린 셈이다.

해외주식실은 전 세계 65개국 7000여 개 종목에 108조원을 투자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외부 운용사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해외주식의 경우 JP모건, 블랙록 등 48개사, 해외채권은 모건 스탠디 등 35개사에 위탁운용하고 있다. 뉴욕·런던·싱가폴 등 3개 해외사무소에선 지난해 9조 800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김성주 이사장은 “지난해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은 7.26%(잠정)로 지난 2011년 이후 최고 실적을 실현했다”며 “현재 총 운용규모는 621조원 수준으로 지난 1988년 이래 기금운용 누적 수익금만 약 300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자업계에선 이날 국민연금이 야심차게 마련한 ‘기금 국민설명회’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한다. 현재 기금운용본부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기금 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기금 설명회 개최와 관련해 사전 공지를 듣지 못했다”며 “어떻게 진행된 사안인 지 모르겠지만 기금운용 본부장도 없는 상태에서 기금 설명회를 열었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연금 관계자는 “기금이사 선정 후 설명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전주 이전 1주년에 맞춰 행사를 열자는 목소리가 더 컸다”고 전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달 반년 넘게 공석 상태이던 기금운용본부장의 공개모집을 시작했다. 지난 5일까지 서류를 접수받은 결과 윤영목 제이스인베스트먼트 부사장과 이기홍 KIC 전무 등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각각 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KIC)에서 운영역으로 일한 바 있다.

2년 임기의 기금운용본부장은 1년 연임이 가능하다. 인선 절차가 통상 두 달 정도 소요돼 최종 임명은 오는 4월 말쯤 이뤄질 전망이다.

/이봉준 기자 bj35sea@metroseoul.co.kr

상장사 516곳 3년간 감사선임 애로 겪을 듯

▶ 1면 ‘새도보통제 폐지후...’서 계속
감사선임 필요기업 301곳 달해

상장사협의회는 올해부터 3년간 516곳의 상장사가 정족수 문제로 감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당장 올해부터 1809개사 기준으로 감사선임이 필요한 기업은 301곳으로 전체 17%에 이른다. 이에 따라 올해 감사선임이 필요한 기업들은 주총에 대한 주주들의 관심이 절실할 실정이다.

◆ ‘떼 주총’ 여전... 주총 분산 요원

금융당국은 새도보통제 폐지가 결정된 이후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성공적인 주총 개최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일단 금융위원회는 주총이 물리는 날을 피한 상장사가 감사인을 선임하지 못해도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떼 주총’ 현상은 크게 완화되지 않았다.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 주총 일정을 신고한 상장사 1283곳 가운데 절반 이상(54.7%)이 3월 22, 23, 28일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한 전자투표제 효과 역시 미미하다.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주총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컴퓨터(PC)나 모바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0년 5월부터 시행된 전자투표제는 지난 해 2~3월 주총을 개최한 상장사 기준 전체 주식 수의 2% 정도만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만약 올해 주총에서 새도보통

폐지로 인한 부작용이 대거 나타날 경우 주총 정족수 완화에 대한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해외는 주총개회를 위한 의결정족수가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영국은 2인 이상만 있으면 주총을 개최할 수 있으며, 독일의 경우는 회사가 원할 경우 스스로 의사정족수를 정할 수 있다. 또 일본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과반수나 정관으로 사체 가능하고, 미국 역시 정관으로 이 비율을 낮출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은 의결정족수 완화를 논하기 어려운 시점”이라며 “주총 분산과 전자투표 활성화 등을 통해 주총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증대시킨 후 조건 완화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은지 기자 sonumji301@



이병찬 신한생명 사장, 민정기 신한BNP파리바 자산운용 사장, 설영오 신한캐피탈 사장, 김영표 신한저축은행 사장, 이신기 신한아이티스 사장

신한금융, 자회사 CEO 5명 연임

‘조직안정’ 방침 사장단 인사 단행 제주은행장에 서현주 전 부행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조직안정’에 방침을 둔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신한지주는 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본사에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자경위)를 열고 그룹사 대표이사 후보를 각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했다고 밝혔다.

먼저 임기 만료되는 6명의 자회사 CEO(최고경영자) 가운데 신한생명 이병찬 사장,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민정기 사장, 신한캐피탈 설영오 사장, 신한저축은행 김영표 사장, 신한아이티스 이신기 사장 등 5명은 연임됐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이번 CEO 인선의 최대 기준은 2020 스마트 프로젝트의 성공적 실행”이라며 “작년 이 프로젝트를 같이 만들면서 가치를 공유한 CEO 중에서 우수한 경영성과와 조직관리 역량을 보인 상당수가 연임하게 됐고, 이로써 2020 스마트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성과달성을 위한 전열이 정비됐다”고 설명했다.

제주은행장에는 서현주 전 신한은행 부

행장이 내정됐다. 서 내정자는 신한은행에서 영업기획그룹장, 개인그룹장, 마케팅그룹장을 차례로 역임한 바 있는 리테일 금융 전문가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신임 제주은행장 후보는 올해 새로 출범한 제주은행의 창도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추진력을 고려해 리테일 금융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서 전 부행장이 추천됐다”고 말했다.

신한베트남은행 신동민 법인장은 상무급 경영진으로 승진했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장기근무가 불가피한 해외법인장들은 기존에는 그룹 경영진으로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왔다”며 “이로 인해 그룹의 해외사업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이들의 역량이 우수함에도 승진시 형평성 이슈가 발생해, 자회사의 이력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이번 승진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신한생명 부사장으로 임보혁 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이 내정됐다. 임 전 부사장은 재무, 리스크 전문가로 최근 보험업 제도변화에 대응력 제고차원에서 추천됐다.

/채신화 기자 csh9101@

노년·청년층 소액 대출때도 소득·채무 의무확인

대부업법 시행령개정령안 입법예고

앞으로 대부업자는 노년·청년층에 대해 3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이라도 소득과 채무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7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는 300만원 이하 소액 대부 시 소득·채무 확인의무가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만 29세 미만 청년층과 만 70세 이상

노령층에 대해선 반드시 소득과 채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나머지 연령층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피해 우려가 큰 청년·노령층 계층에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연령층은 중장기적으로 시장 추이를 보가며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대부시장에 대한 전문적 감독 강화를 위해 등록 대상이 되는 대형 대부업자의 기준을 현행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초과로 확대한다. 기

존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시행령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매입채권추심업자 재무요건은 현행 자기자본요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한다. 기존 업자에 대해서는 증자 등 대응기간을 고려해 시행령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그간 최고금리 인하 및 대부중개영업의 수익 확대 추이를 반영해 중개수수료 상한은 현행 최대 5% 이내에서 최대 4% 이내로 하향 조정한다.

/채신화 기자